

1 다음 중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 ① (○)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 편익은 높은 수준으로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낮은 수준으로 다수에게 분산. 소수 수혜자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규제기관의 정책형성·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압력 행사. 정부관료(규제기관)가 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집단(피규제기관)의 이익을 대변(Agent)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나 포획(capture)이 강하게 나타나고, 양자 간 공생관계를 보이며, 전체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수 있음. 정부규제 도입 과정에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가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 공익집단의 항의나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 없이 은밀하게 이뤄짐

- ② (×)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내용임.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 ③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④ (○) **규제존속기한·재검토키한 명시(규제일몰제)** :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해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하며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1항, 2항).

답 ②

2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9급

-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해설

- ② (×) 공유재의 비극은 편익은 개인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전체에게 분산되는 사례이다. 개개인의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들이 전체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 하딘(D. Hardin)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1968년 <사이언스>에 실렸던 미국 생물학자 G. Hardin의 논문에 나오는 개념. ② 주인 없는 일정한 면적의 목초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목동들이 이기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소를 늘려 방목하면 목초지의 재생능력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결국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는 전체의 손실을 초래. 이는 개인이익의 극대화 추구가 공익의 파괴와 나아가 개인이익 자체의 파괴까지 초래한다는 논리. →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충돌(개인 효용과 사회 효용의 부조화), 집단행동의 딜레마(이기적 행태로 인해 효과적 대처를 못하고 모두가 피해를 봄)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유지는 성격상 공유재이며, 비배제성·경합성을 지니므로 무료사용이 가능하여 과다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자원손실로 이어져 타인의 사용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 이는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이기적 성향(합리적 경제인)에서 비롯됨.

	<p>② 자유방임상태에 두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경향이 공익을 침해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이기적 개인의 사익추구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줄 것이라는 A. Smith의 예정조화관과 반대되는 주장). 따라서 자원고갈이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정부규제나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 외에도 개개인의 자기이익추구 경향으로 인해 공익이 저해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 예 환경오염,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로 예산이 특정집단에게만 할당되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p> <p>③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된 희소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으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화의 '보호'에 관한 것.</p> <p>④ 편익은 개인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전체에게 분산되는 사례. 행위자들이 "개인의 편익이 공멸로 인해 부담하게 될 비용보다 크다."라고 인식할 때 발생.</p> <p>⑤ 한 사람의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현상. 예 물고기 남획시 어족자원 고갈, 개인화장실보다 더러운 공공화장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p>								
해결 방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고전적 시각</td> <td rowspan="2" style="width: 15%;">정부개입</td> <td style="width: 65%;">공유재의 사유화(소유권의 명확화) - G. Hardin</td> </tr> <tr> <td>행정국가</td> <td>정부가 이용을 규제</td> </tr> <tr> <td>현대시민사회</td> <td colspan="2">구성원 간 자발적 합의 : 사회적 자본이나 제도(신제도론에서의 '제도'를 의미함) - E. Ostrom</td> </tr> </table> <p>① 소유권의 명확한 설정(사유재산권 확립, 공유재의 사유화) - 하딘(G. Hardin) : 공유재의 소유권을 설정(배제성)하여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봄. 예 이면도로 지정주차제, 소유권을 설정하고 세금이나 사용료 징수</p> <p>② 정부규제 : 과다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규제와 위반시 처벌. 예 금어(禁漁)기간 어획시 벌금</p> <p>③ 공동체의 자율해결(자발적 합의) - 오스트롬(E. Ostrom) : 공동체 구성원인 사용자간에 공멸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를 형성하여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칙(제도)을 설정(정부개입 없는 해결방안).</p> <p><small>*E. Ostrom은 1983년 '제도적 분석의 방법-규칙, 게임 그리고 공유자원(Rules, Games & Common-pool Resources)'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하는 신제도론적 경제학을 행정학에 소개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이해당사자가 일정한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행위규칙)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유자원은 사유화하거나 정부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mall></p>	고전적 시각	정부개입	공유재의 사유화(소유권의 명확화) - G. Hardin	행정국가	정부가 이용을 규제	현대시민사회	구성원 간 자발적 합의 : 사회적 자본이나 제도(신제도론에서의 '제도'를 의미함) - E. Ostrom	
고전적 시각	정부개입	공유재의 사유화(소유권의 명확화) - G. Hardin							
행정국가		정부가 이용을 규제							
현대시민사회	구성원 간 자발적 합의 : 사회적 자본이나 제도(신제도론에서의 '제도'를 의미함) - E. Ostrom								

답 ②

3 다음 중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승진

- ①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④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 ①②④ (○) ① 행정조직의 내부성(조직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②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에 따른 X-비효율성, ④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정부실패 원인
- ③ (×) 시장실패 원인인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임. 정부실패 원인인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비의도적 잠재적 효과나 부작용.

답 ③

4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8급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설

- ① (×) '직접 관계된' ⇨ '직접 관계되지 않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 경쟁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므로 비용절감·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높임.
- ③ (○) 우리나라 경우 관료들이 퇴임 후의 자리보장수단으로 준정부조직 등 관변단체를 만들고,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업무 일부를 위탁하기도 했다.
- ④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혁신과 인력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혁신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수직적·하향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위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답 ①

5 다음 중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국가9급

	BTO 방식	BTL 방식
①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②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③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④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해설

② (×) BTO, BTL 모두 준공과 동시에 건설한 민간업체가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운영기간 동안 시설소유권은 둘 다 정부에게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방식	수익형 민자사업(BOT, BTO)	임대형 민자사업(BLT, BTL)		
운영방식				
대상시설	수익사업 :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경전철, 주차빌딩 등	비수익사업 :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구입형) - 학교·일반철도·수목원·공공임대주택·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투자비 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 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정부 재정 부담)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운영수입의 변동 위험) ⇒ 적자보전협약에 의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필요. ※ 우리나라는 MRG를 폐지하고 투자위험분담제(BTO-a, BTO-rs방식)로 전환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운영수입 확정)		
수익률	높은 위험에 상응한 높은 수익률	낮은 위험에 상응한 낮은 수익률(수익률 사전 확정)		
유형	BOT 방식	BTO 방식	BLT 방식	BTL 방식
운영주체	민간이 운영(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정부가 운영(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소유권 이전 시기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기간 동안 시설 소유 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답 ②

6 다음 중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경찰간부

- 생태론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행정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 생태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
-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설

④ (×) 행정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행정과 그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따라서 생태론적 접근은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위자 개개인보다는, 집합적 행위나 제도의 수준에서 행정현상을 설명하므로 '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띤다. 분석수준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미시적 차원에서 인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한 이론은 행정행태론이다.

답 ④

7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 국회8급

-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해설

- ① (×) 공익을 사익들의 총합(타협·조정)의 결과)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지만 사익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본다.
- ② (×) 행정의 민주성이란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조직의 인간화·민주화)과도 관계가 있다.
- ③ (○) 수익자부담 원칙은 이용자 모두에게 이용요금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하므로 수평적 형평성(같은 것은 같게)과 관련된다.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임용제도이므로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과 관련된다.
- ④ (×) 가외성은 구조와 기능을 중복시키는 것으로서 만장일치는 하나의 의견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외성과 관련이 없다. 계층제도 명령통일의 원리에 의한 수직적·집권적인 독임제 형태로서 가외성과 관련이 없다. 단 계선 외에 막료를 추가적으로 두는 것은 가외성과 관련된다.

답 ③

8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 내용의 설명과 관련있는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 ① 시장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

해설

탈규제정부 (저통제정부) (deregulated)	전통적 정부의 '내부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 관료의 창의성과 활동주의(activism)를 지향. ①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 재량이 규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반. 정책과정에서 관료에게 강력한 정책형성 역할 부여. ② 내부통제를 위한 규제가 제거되면 정부관료제가 역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봄. ③ 내부규제에 초점을 두므로 조직구조에는 관심이 없음. 관리에서도 참여정부모형과 유사. ④ 한계 : 관료의 재량 남용과 부패 우려, 내부통제 약화.
-----------------------------------	--

답 ④

9 다음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7급

- ①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 ②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③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① (×) 사회간접자본(SOC) 정책(도로, 학교, 다리, 항만, 철도 등 건설)은 분배정책의 예이다.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의의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 권리 등과 같은 각종 가치배분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으로 복지정책,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관련.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 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옴. (예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건설, 부(負)의 소득세, 통합국민건강보험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① 재산권 행사보다 재산권 자체, 평등한 대우보다 평등한 소유, 행태(behavior)보다는 존재(being)를 의도(aim)함. ② 수혜집단(저소득층)과 비용부담집단(고소득층) 모두가 계층분화에 따라 특정적이며, 정책대상집단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에서 배분정책과 구별됨. 비용부담집단인 기득권층의 저항 이 심하게 나타나 정치적 갈등 수준이 높고 정책집행이 곤란함. 실제 정책의 집행과 성공은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결단과 정책참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 ③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로 부(富)를 이전하는 영합(zero-sum) 게임 으로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정·통제되므로 계급대립적 성격 이 강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 강력한 이해대립과 사회계급·복지혜택·평등·정의·국가 역할 등에 관한 이념논쟁(이데올로기적 대립) 야기(사회의 어떤 계층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다른 한 계층이 이득을 보므로 계층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나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장으로 사회전체에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진전되기 힘들다. 결국 정책과정의 높은 가시성과 갈등 이 특징임). ④ 강제력이 직접적·일률적으로 환경에 미치므로 집권적·체제적인 결정이 이루어짐. 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양분된 계층 간 갈등·조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도권은 정부 고위관료, 기업 및 노동조합의 지도자 등 엘리트 집단이 지니며,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사회 내 계급관계의 안정성에 기인하여 매우 안정적인. ⑥ 정책결정은 엘리트들의 제휴(association) 에 의해 이뤄지므로 엘리트론적 정치 가 강하게 나타남.

답 ①

10 다음 중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경찰승진

- ①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 ②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해설

① (×)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로서 외견상 나타난 두 변수의 인과관계의 음과 양의 방향을 정반대로 해석해야만 옳은 해석이 되도록 만드는 변수

▣ 정책평가시 인과적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제3의 변수

• X :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 Y :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 Z : 제3의 변수 * 독립변수는 정책수단, 종속변수는 정책효과에 해당.

$\begin{matrix} X \cdots \cdots Y \\ \swarrow \quad \searrow \\ Z \end{matrix}$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	하위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실제 관계가 없는 데도(또는 통계적 상관관계만 있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데도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변수(사실적 상관관계를 약화·소멸시킴)
	왜곡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외견상 나타난 두 변수의 인과관계의 음과 양의 방향을 정반대로 해석해야만 옳은 해석이 되도록 만드는 변수
	혼란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변수(교란변수) ▽ 하위변수 : X와 Y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 ▽ 혼란변수 : X와 Y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간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함(X→Y 설명 곤란)
$\begin{matrix} X \longrightarrow Y \\ \uparrow \\ Z \end{matrix}$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제2의 독립변수로 작용(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독립변수). 두 변수 간 관계(상호작용효과)를 강화나 약화시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음. 예) 다이어트 요법 A, B(독립변수)의 체중감소효과(종속변수) 측정시 효과 동일 다이어트 요법 A, B에 각각 운동요법 결합시 체중감소효과가 A보다 B가 큰 경우 운동요법은 조절변수
$X \Rightarrow Z \Rightarrow Y$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① 집행변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행해 옮기는 데 채택된 구체적 행정적 전략 ② 교량변수 : 정책목적의 달성에 앞서 나타나야 할 일종의 중간 결과
$Z \Rightarrow X \Rightarrow Y$	선행변수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 선행변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① 선행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상호관련이 있고, ② 선행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사라지면 안 되며, ③ 독립변수를 통제할 때 선행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사라져야 한다.

*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의 하위변수(예) 사회계층은 '포괄적 개념'이며, 교육수준, 수입, 직업, 가족적 배경 등은 이를 구성하는 '하위변수')

답 ①

11 다음 중 매트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 사항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 ③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설

③ (×) 제시된 설명은 모호성과 갈등이 모두 높은 상징적 집행(Symbolic Implementation)과 관련됨. 모호성이 낮고(목표 명확) 갈등이 높은 상황은 정치적 집행으로서 집행과정을 학습과정으로 이해.

▣ 매트랜드(R. Matland)의 통합모형(정책집행의 상향적·하향적 집행의 통합모형)

기존 연구처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상·하향적 접근법이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적용되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집행변수가 무엇인지 탐색.

구분	갈등 낮음	갈등 높음
모호성 낮음	관리적 집행(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 자원 확보가 중요, 계층제·집권, 정형화된 결정(SOP), 규범적 수단	정치적 집행(Political Implementation) - 권력관계 중시, 매수·담합·날치기통과, 강압적·보상적 수단
모호성 높음	실험적 집행(Experimental Implementation) - 상황적[맥락적] 조건 중시, 집행과정은 학습과정	상징적 집행(Symbolic Implementation) - 연합체들 간 권력관계 중시,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과정

관리적 집행	목표가 정해져 있고 갈등수준이 낮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이 알려져 있어 정책결과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여부에 의해 결정됨. 정책과정은 계층제에 기반 한 중앙집권적 권위 가 특징이며, 갈등 수준이 낮으므로 강압적·보상적 수단보다 규범적 수단 으로 충분히 순응 확보 가능. 모호성이 낮으므로 집행담당자들은 표준운영절차(SOP) 를 개발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구조화하고 정형화된 결정 을 함. 정책집행의 실패는 기술적 문제(자원·시간 부족, 의사전달과정 왜곡, 통제·감시수단의 비효율성 등)로 인해 발생	하향적 접근이 적합
정치적 집행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나 갈등수준 높음. 행위자들이 상이한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을 가진 경우 발생하므로 정책결과는 권력관계 에 의해 결정됨. 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강제력을 행사해 자원·지지를 확보하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으므로 순응 확보를 위한 강압적·보상적 수단 중요. 갈등은 매수(side payment), 담합(log rolling), 날치기통과(oversight) 등을 통해 해결(행위자의 독립성·자율성이 강하면 상위목표에 대한 합의 없이 집행될 수도 있음).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는 하향적 접근이 적합

실험적 집행	쓰레기통모형의 가정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참여자의 선호가 모호하거나 필요한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 정책결과는 집행현장에서의 집행관료의 선호와 능력 및 자원 등 상황적[맥락적] 조건 에 의해 결정됨(집행결과는 집행이 일어나는 현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 집행과정은 학습(learning)과정 으로 이해됨.	상향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
상징적 집행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높음. 새로운 정책목표의 공고화, 계속 추진되던 정책목표 재확인, 중요한 가치·원칙 강조를 위한 상징적 집행 발생. 상징적 집행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자원을 가진 행위자들이 형성한 다수 연합체들의 권력관계 이며, 연합체들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행 현장의 맥락적인 조건들임. 목표가 모호하므로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interpretation) 과정 으로 이해됨.	상향적 접근이 적합

구분	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목표·수단	명확, 갈등 낮음	명확, 갈등 높음	불분명, 갈등 낮음	불분명, 갈등 높음
정책결과의 결정	자원 확보	권력관계	맥락적[상황적] 조건	연합체의 권력관계
집행과정	계층제, 중앙집권적	대립적인 외부행위자에 의해 영향받음	상황에 따라 다양	상황에 따라 다양
순응확보	규범적 수단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	-	-
집행특징	SOP. 실패는 기술적인 문제	매수, 담합, 날치기 등으로 갈등 해결	집행과정을 학습과정으로 이해	집행과정은 해석과정으로 이해
적합한 접근법	하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답 ③

12 다음 중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7급

-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 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접근 방법을 도입하였다.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 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 신엘리트이론은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주장한 것으로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보고, 권력의 어두운 측면으로 무의사결정(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을 제시. 밀즈와 헌터의 이론은 무의사결정까지 제시하지는 못함.



- 고전적 엘리트론 : 파레토(V. Pareto), 모스카(G. Mosca), 미헬스(R. Michels). 사회는 소수의 지배층(엘리트)과 다수의 피지배층(대중)으로 구성
- 통치엘리트권력론 : 밀즈(C. Mills)의 지위접근법, 헌터(F. Hunter)의 명성적 접근법. 1950년대 미국사회의 엘리트 지배현상을 지적한 이론.
- 신엘리트론 :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 권력의 두 얼굴.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무의사결정론 주장.

답 ②

13 다음 중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7급

-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 정책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해설

③ (×) 세가지 흐름은 상호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 결합(coupling)하게 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고 정책의제설정이나 정책결정이 이뤄진다고 봄.

정책의 창 모형(Policy Window Model)[정책흐름 모형, 다중흐름모형] - 킹던(J. Kingdon)

의의

- ① 킹던(J. Kingdon)이 제창한 모형으로서, 의사결정에 관한 쓰레기통모형을 다소 변형시켜 서로 연관이 없으면서도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구성하는 **문제·정치·정책흐름**을 현실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모형.
- ② 정책의 창 :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기회.
- ③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참여자와 정책의제나 정책대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중시하며, 세 가지 흐름이 합류되면 창이 열리고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정치의 흐름과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강조.**

정책 결정

- ① **정책과정의 세 흐름** : 문제(problem)흐름, 정책(policy)흐름, 정치(political)흐름이 상호 독립적(상호의존적)으로 방만하게 흘러 다니다가 일정한 상황에서 만날 때(coupling) 우연히 정책으로 채택됨(정책의 창이 열림).
 - ㉠ 정책문제의 흐름 : 정책결정자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 ㉡ 정책대안의 흐름 :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
 - ㉢ 정치의 흐름(기회) :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압력행사 등
- ②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 정책선도자)는 세 가지 흐름을 합류·합성시키는 역할을 담당.
- ③ 분출효과(spillover) : 정책의 창이 열리면 비슷한 성질의 정책의제에 대한 창도 열릴 확률 증가
- ④ 정책의 창은 매우 좁고 희소한 자원으로 오래 열려 있지 않고 곧 닫히며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⑤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계기와 닫히는 계기**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계기	정책의 창이 닫히는 계기
㉠ 정치흐름의 변화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음(예 정권교체, 정당의 의석점유율 변경) ㉡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은 발생으로 열리는 경우(예 세계무역센터테러 → 항공안전운행정책) ㉢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일정에 의해 열리는 경우(예 예산심의·국정감사) ㉣ 기타 국민감정의 변화, 시급한 공공문제의 대두.	① 문제의 충분한 논의 ② 정부행동 유도 불능 ③ 사건의 퇴조 ④ 고위직의 인사이동 ⑤ 대안의 부재(不在)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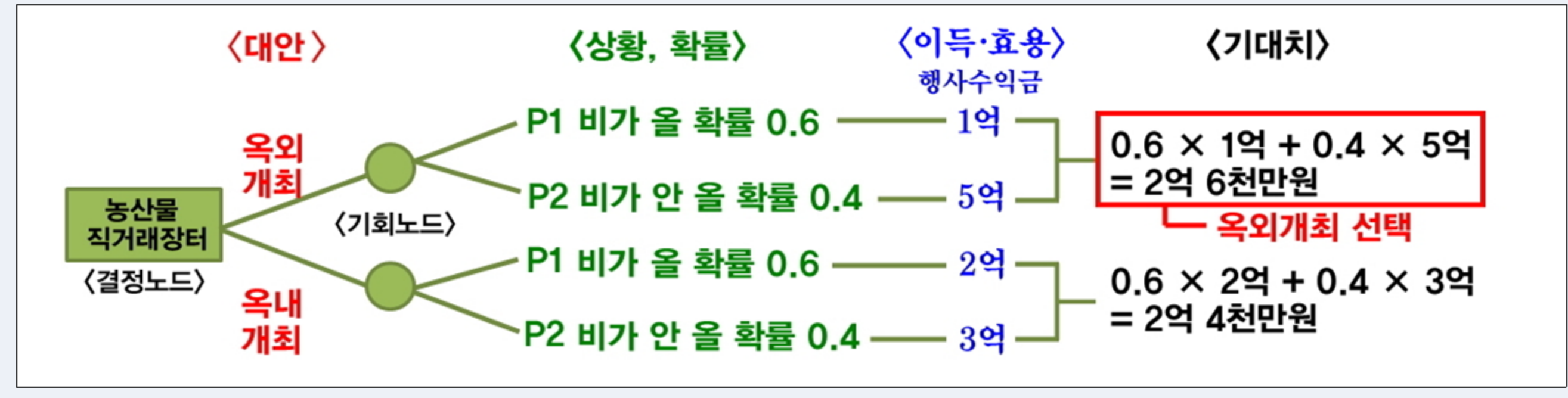
14 다음 중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7급(하)

- ①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②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 ③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 ④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해설

- ① (×) 민감도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 **원인변수 변화에 대한 결과변수의 민감한 반응 정도의 분석**
 - ㄱ 원인변수가 내생변수(모형 내 통제 가능한 변수, 정책변수) : **민감도 분석**
 - ㄴ 원인변수가 외생변수(통제 불가능한 외적 변수, 환경변수·조건변수) : **상황의존도분석**
 - **민감도 분석** :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 상의 변수(parameter)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추정 상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변수값 대신 다른 변수값으로 대치하여 이것이 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방법.
 - **상황의존도분석** : 민감도분석과 유사하나, 한 모형에서 파라미터의 변화가 아니라 외생변수나 조건변수의 변화에 따라 정책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 ② (○) 칼도-힉스(Kaldor-Hicks) 보상기준은 어떠한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은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 이는 비용편익분석의 비교기준 중 '비용<편익'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순현재가치법(NPV) 기준과 관련됨.
- ③ (○) 추세연장법(시계열분석) 중 과거 변화추세가 명료한 경우 선형경향추정 활용
- ④ (○) 의사결정분석(Decision Analysis)은 각 대안과 상황발생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확률적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확률론적 분석기법이다. 하나의 정책결정은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의 의사결정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기법. 간단한 경우 결과표(청산표 ; payoff table)로 나타내지만 복잡하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 의사결정수[意思決定樹])라는 도해적 방법을 사용한다. 위험(risk) 상황(확률적 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대안, 결과상황, 결과상황의 확률, 이득(효용)으로 구성된 의사결정나무를 작성(의사결정자 통제 하의 결정노드와 통제 밖의 기회노드로 구성)하고 기대치를 계산(확률×이익)하여 선택을 한다.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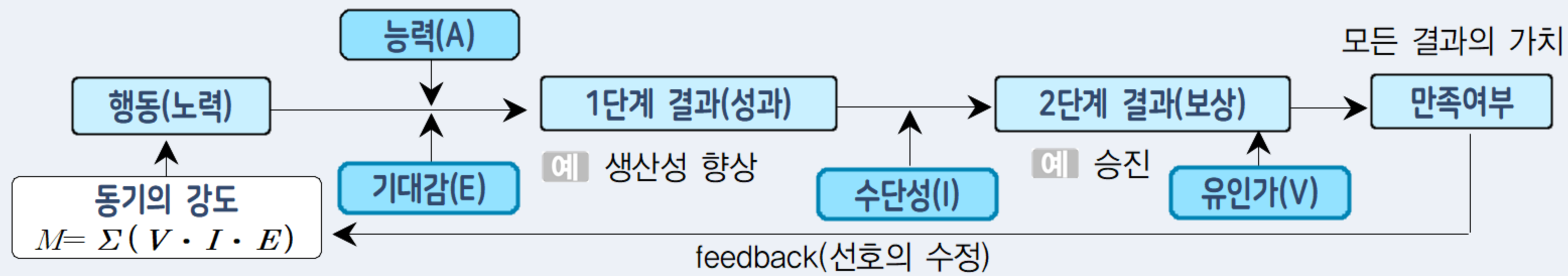
15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 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 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③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해설

④ (x) Vroom의 선호-기대이론에서 성과(1단계 결과)와 보상(2단계 결과)에 대한 인식은 기대치(기대감, expectancy)가 아니라 수단성(instrumentality).



답 ④

16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국가7급

-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 ③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 ④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해설

- ① (○) 피들러(F. Fiedler)는 리더의 특성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상황 특성에 맞는 리더를 선발하여 배치하거나, 리더의 특성에 맞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활용(관계지향적 리더가 매우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과업지향 리더가 중간 정도로 유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부적합한 결합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 ② (x) 구성원의 충분한 경험·능력·훈련·지식은 지원적 리더십이 아니라 지시적 리더십의 대체물로 봄(지시적 리더십 필요 없음).

■ 커와 저미어(S. Kerr & J. Jermier)의 리더십 대체물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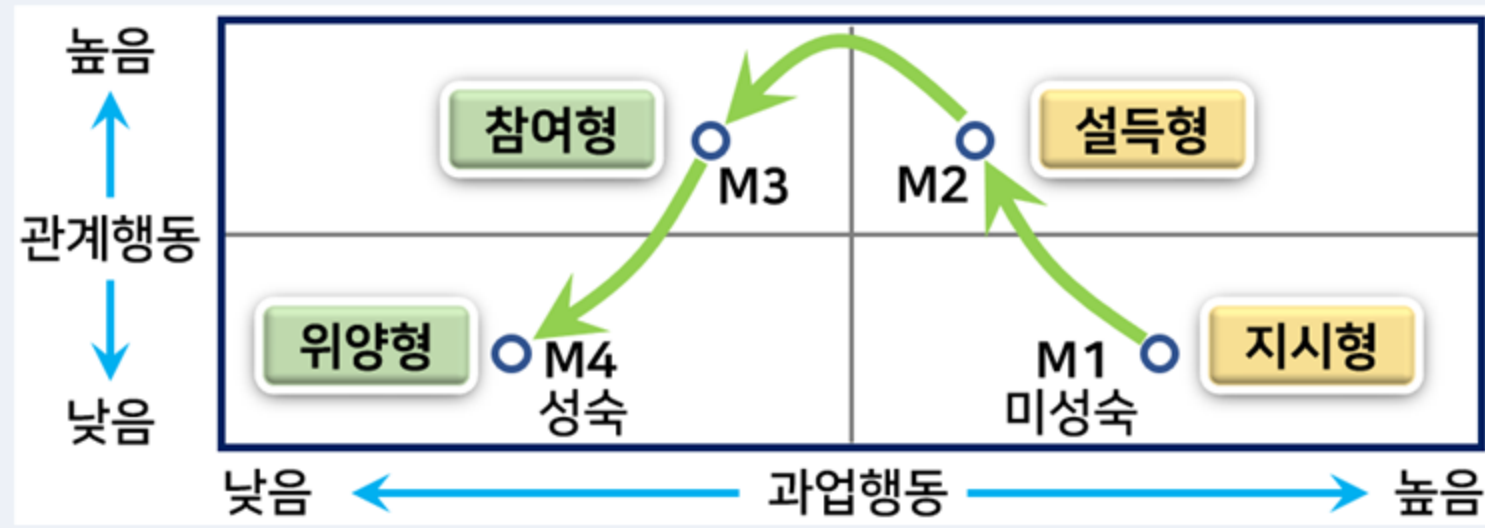
대체물(리더십 발휘를 불필요하게 함)과 중화물(리더십의 필요성을 약화시킴) -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상황적 요인		영향 받는 리더의 행동	
		지시적 리더십(구조주도)	지원적 리더십(배려)
대체물	부하특성	부하의 경험·능력·훈련·지식	대체물
		전문가적 지향(professionalism)	대체물
	과업특성	구조화되고, 일상적이며, 애매하지 않은 과업	대체물
		과업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대체물
조직특성	내적으로 만족되는 과업	대체물	
	응집력이 높은 집단	대체물	
중화물	부하특성	공식화·표준화(명확한 계획·목표·책임영역)	대체물
		조직의 보상에 대한 무관심	중화물
	조직특성	조직의 보상에 대한 리더의 통제력 부족	중화물
		경직성(엄격한 규칙과 절차)	중화물
	리더와 부하 간 공간적 거리	중화물	

- ③ (○) 비구조화된 과업 수행시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리더십이 적합, 구조화된 과업 수행시 지원적 리더십이 적합.

■ 하우스와 에반스(R. House & M. Evans)의 경로-목표모형(Path-Goal Theory)

상 황 변 수		적합한 리더십 유형				
부하의 특성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	자신의 능력·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	지시	지원		
		자신의 능력·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식		지원	참여	성취지향
	통제력의 소재에 대한 인식	외부(관리자에 의한 통제)	지시			
		내부(자기 스스로 통제)			참여	
	욕구·동기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강함	지시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강함		지원		
성취욕구 강함				참여	성취지향	
업무[근무] 환경의 특성	과업의 구조화 정도	비일상적이고 비구조화된 과업(역할모호성 높음)	지시		참여	성취지향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작업(단순 반복적 과업)		지원		
	작업집단의 특성	집단형성 초기(불안정·형성기)	지시			
		집단형성 완료(안정·정착기)		지원	참여	
	조직의 특성 (공식적 권한 체계)	종업원의 작업을 지배하는 공식적 규칙·절차·방침 등 불명확	지시			
		종업원의 작업을 지배하는 공식적 규칙·절차·방침 등 명확			참여	

④ (○) ■ 허시·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 효과성 모형(Tri-dimension Leader Effectiveness Model, 1988). 생애주기론



부하의 성숙도	M1	M2	M3	M4
직무상 성숙도(능력)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심리적 성숙도(의욕·동기)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적합한 리더십 유형	지시형 (9,1)	설득형(지도형) (9,9)	참여형 (1,9)	위양형(위임형) (1,1)
*()안은 관리망이론의 경우				

답 ②

17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설

① (×) '수직적 분화' ⇨ '수평적 분화'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복잡성(complexity)	분화(분업)의 정도	
	수평적 분화	직무의 종류·성질별 부문화(예 행정부의 각 부처의 구분)와 직무의 전문화(분업화).
	수직적 분화	계층화. 조직 내의 책임과 권한이 나뉘어 있는 계층의 양태(조직 내 계층의 수).
	공간적 분산	인원·시설의 지역적·물리적 분산.
공식성(formalization)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 정도.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대해 조직이 규칙·절차에 의존하는 정도	
집권성(centralization)	의사결정권·지휘감독권이 어느 개인, 계층, 집단에 집중되거나 위임되어 있는 정도. 상층부나 소수에게 집중되면 집권성이 높고, 하층부나 다수에게 분산되면 집권성이 낮아짐.	

답 ①

18 다음 중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지방7급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 ① (×) 전문화로 인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한 가지 분야의 지식·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조건이나 변동된 상황에서도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이 촉진되는 현상으로 분업과 전문화로 인해 발생한다.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목표전환(displacement)이다.
- ② (○)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피터의 원리가 작용한다.
- ③ (×) 할거주의는 관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만을 종적 배타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조직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태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조언·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상관으로부터의 지시·명령이 옳든 그르든 이에 맹종·영합(conform)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상은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연구한다. 즉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순차적 과정인 변이(계획적 변화 또는 우연한 변화) → 선택(환경과의 적합성 여부, 동일성 원칙 또는 동형화 원리) → 보존(제도화)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를 연구한다.

답 ②

21 다음 중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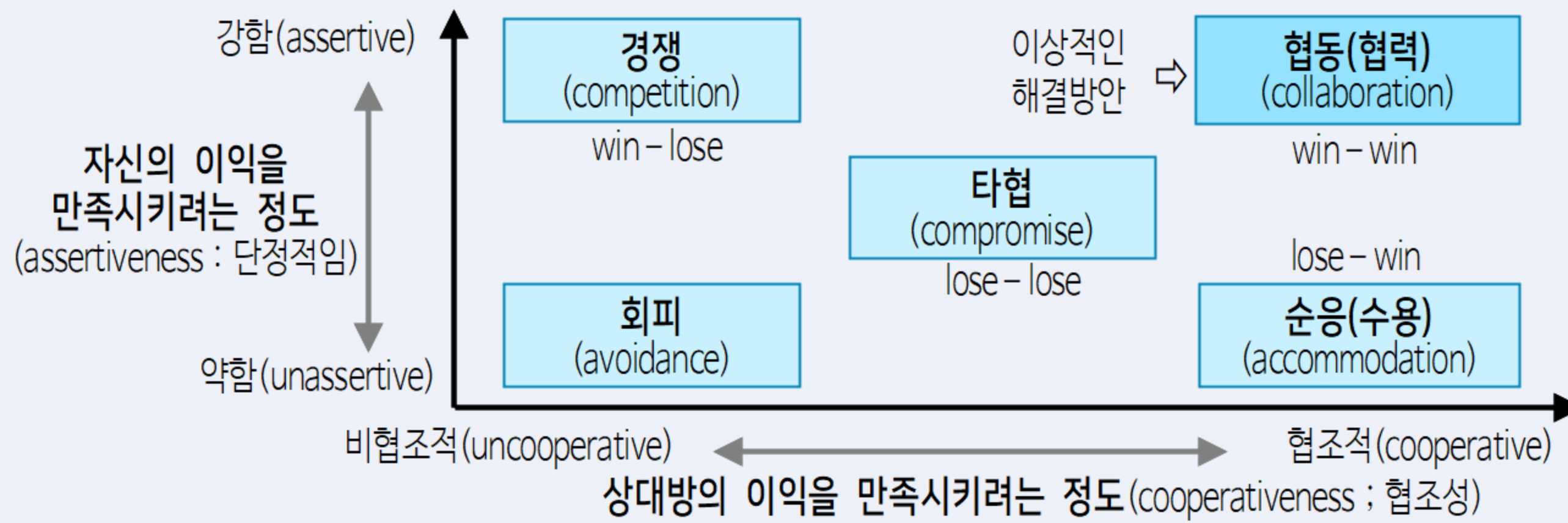
2022 해경간부

- ① 갈등 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②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설

① (○) ② (×) ③ (×) ④ (×) ②는 타협(compromise)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 토마스(K. Thomas)와 킬만(K. Thomas & R. Kilmann)의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2차원 갈등해결 모형)



■ 토머스(K. Thomas)의 대인적 갈등관리방안별 적용 상황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or 한쪽 권한이 우위인 경우 해결책 • 비용절감·규칙준수 등 인기 없는 조치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처럼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 필요 • 의사결정자가 조직 전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라 생각할 경우
협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관심사가 너무 중요해 타협이 곤란한 상황에서 통합적 해결 필요 • 양측 관심사를 통합해 몰입을 얻으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해결 목적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우려는 경우 • 관계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감정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경우
타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을 얻으려 할 경우 • 목표달성이 중요하나 강압적 방법은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응변적 해결이 요구될 경우 •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상대방이 상호배타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시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문제는 사소하고, 다른 문제는 더 긴급한 경우 • 당사자들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 경우 • 제3자가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관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 즉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하는 경우
순응(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단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신뢰성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과의 조화가 특히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의 중요성이 상대방에게 훨씬 큰 경우 • 상대방이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스스로 찾게 하려는 경우

- ③ (×)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건설적 갈등 유발을 통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므로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 ④ (×) 갈등 해소·완화방안으로서 공동목표·상위목표(superordinate goals)에 입각하여 하위목표에 대한 이견 대립을 설득·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답 ①

22 다음 중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여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크랜츠(Kranz)는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주의 인사를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해설

- ①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소득·고학력 계층 자녀만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공직취임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나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여,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실적주의 하에서 강조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인 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며, 관료제의 대표성·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 크랜츠(H. Kranz)는 대표관료제 개념을 비례대표까지 확대시켜 관료제 내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하고, 관료제 내 모든 직무와 계급의 구성비율도 총인구비율에 상응하게 분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 대표관료제 적용으로 전문적 능력이 미흡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공직 취임기회를 보장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반영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처럼 실제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수평적 평등의 저해). 더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종래에 혜택을 받아오던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업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④ (○)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Balanced - Personnel) 정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이다.

답 ③

23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②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④ (○)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치적 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명에 특수한 기준을 요하는 공무원이다.

② (×)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함

③ (○)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답 ②

24 다음 내용 중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운용한다.
-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의하면 기여금은 최대 33년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다.
-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공무원연금의 대상이지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 퇴직연금의 재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반면, 퇴직수당은 정부가 단독 부담한다.
- ㉤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공기관 유형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에 위탁되어 운영됨.

• 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 (×) 기여금(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납부기한은 최대 36년이며,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함.

㉢ (○)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	①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장관·차관 포함) ■ 2018.9. 법 개정으로 구법의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에도 적용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 비정규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단,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적용 제외	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 군인은 군인연금법 적용. 선출직은 장기간 근속의 담보가 없으므로 제외됨. ②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재원은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 분담, 퇴직수당의 재원은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

■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의 종류

- ㉠ 단기급여 :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 장기급여

퇴직급여 (재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퇴직연금	① 10년 이상(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폐직·과원, 60세 미만 정년규정, 계급정년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단, 지급개시연령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음 ② 퇴직연금 금액 :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1.7%) 상당 금액(지급률은 1.9%에서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단 퇴직연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연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 소요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답 ③

25 다음 중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 ②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대상(pool)에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외무직)도 포함된다.
-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 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 구분하여 충원된다.

해설

①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도입,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 ■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의 군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의미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 도의 농업기술원장	㉠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인 장학관으로도 임용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 고위공무원단 충원방식인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는 모두 타 부처 공무원에게도 개방되므로 다른 부처로의 이동 가능성 증가.
 ④ (○)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충원방식**

자율직위(50%)	공무원승진	역량평가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심사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고위공무원 임용 (임용권자 : 대통령)
	외부경력채용	채용공고, 서류, 면접	⇒	역량평가				
개방형 직위(20%)	(공직 내외 경쟁)	중앙선발심사위원회	⇒	역량평가	⇒		⇒	
공모직위(30%)	(공직 내부 경쟁)	역량평가	⇒	부처선발심사위원회	⇒		⇒	

답 ①

26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분류제의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계급제는 출신, 연공서열 등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조하므로 보수 및 직무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직위분류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여 일반행정이 양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해설

① (○)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 ③ (×) ③은 계급제의 특징

계급제	직위분류제
• 직무급 체계 확립 곤란, 보수체계의 비합리성 : 생활급 위주이므로 동일 계급 하에서는 직무 종류·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므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라는 직무급 확립 곤란(업무와 보수의 형평성이 낮음). • 배치전환의 신축성·융통성 - 능력발전 중시, 전직·전보범위 넓음(외부개방성은 낮고, 수평적 개방성은 높음) • 배치전환 기준의 비합리성 • 일반행정가주의(넓은 식견, 낮은 지식 수준, 행정적 권위) • 행정의 전문성 낮음	• 직무급 수립과 합리적 보수체계, 보수의 형평성(공정성)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체계의 형평성(직무수준과 보수수준의 균형) 확보. • 배치전환의 비신축성·비융통성 - 동일 직군 내 이동, 전직·전보 범위 좁음(외부개방성은 높고, 수평적 개방성은 낮음) • 배치전환 기준의 공정성·합리성(적재적소 배치) • 전문행정가주의(좁은 식견, 깊은 지식 수준, 전문적 권위) • 행정의 전문성 높음

④ (○) **대응력-외부 환경(국민)에의 대응력과 직무 변화에의 대응력**

㉠ 외부 환경(국민)에의 대응력은 직위분류제가 높음 : 직위분류제는 개방형과 결합되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을 관찰해 오던 외부인사에게 충원의 문호를 개방하므로 민의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 계급제는 폐쇄성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하거나 특권집단화되어 결국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공직의 경직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직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계급제가 높음 : 계급제는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축성이 커 직무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직위분류제는 지나친 직무구조의 편협성과 비탄력적 분류체계 때문에 직무변화에 신속히 대응 곤란.

답 ③

2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 ②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감액되며(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

해설

④ (×) '3분의 2를 감하고' ⇨ '3분의 1을 감하고'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경징계	견책 (譴責)	•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공식적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 •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사용빈도가 높음.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교정 징계
	감봉 (減俸)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함(2/3 지급).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停職)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배제 징계 (공무원 신분 상실)
	강등 (降等)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는 강등 적용 안 함.	
	해임 (解任)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3년간 공직 취임 제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 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4을, 5년 미만인 자는 1/8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4을 감액 지급.	
	파면 (罷免)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급여는 감액 지급.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2을, 5년 미만인 자는 1/4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2을 감액 지급.	

■ 해임과 파면의 효과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공직취임 제한
해임	원칙 : 영향 없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1/4 감액 지급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1/8 감액 지급	원칙 : 영향 없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시 1/4 감액 지급	3년간
파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1/2 감액 지급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1/4 감액 지급	1/2 감액 지급	5년간

답 ④

28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고, 1939년 해치법(Hatch Act)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다.
-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무감각을 조장하여 참여관료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고, 자율적 자기 통제를 통한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한다.

해설

① (○) 미국의 정치적 중립 규정

<p>업관주의</p> <p>정치적 책임성 강조 행정이 정치에 예속</p>	⇨	<p>실적주의</p> <p>정치적 중립성 강조 1883 펜들턴법(최초 규정) ⇨ 1939년 해치법(정치적 중립 강화)</p>	⇨	<p>적극적 인사행정</p> <p>정치적 중립의무 완화 1974 연방선거운동법</p>
---	---	--	---	--

②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 ④ (×) 정치적 중립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 · 중요성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특정 정당의 이익에 편협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함.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낭비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며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③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능률성·전문성 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x)
----------------------------	---

한계·단점 (정치적 중립의 완화 필요성)	① 공무원의 참정권 제한 :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여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② 정당정치 발전 저해 : 정당정치 발전과 정당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곤란 ③ 참여적 관료제의 저해 :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으로 공무원집단의 이익이 경시되고, 중·하위 공무원의 정책형성에 대한 참여기회 및 대내·외적 의사표현기회를 넓혀주는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을 저해. ④ 대응성 저해와 관료제의 폐쇄집단화 :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공무원의 이념적·정책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정부관료제를 환경의 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폐쇄집단으로 만들 수 있음. ⑤ 행정책임 강조와의 모순 :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율적 책임 등 행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지나친 정치적 중립은 관료제의 책임회피·무사안일을 야기함. ⑥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의 가능성 문제 :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 충원은 특정집단,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이 곤란. 공무원 구성상 출신성분 등의 조화·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 이익을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는 곤란함. ⑦ 행정과 정치 분리의 비현실성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론은 정치·행정2원론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의 유물이므로 정치·행정1원론이 지배적인 오늘날에는 부적합함. ⑧ 타율적·외재적 통제의 한계 : 오늘날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내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율적·외재적 통제인 정치활동의 법적 제약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음.
------------------------------------	--

답 ④

29 다음 중 「국가재정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①②③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④는 헌법에 규정.

①② (○)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 관련 헌법 규정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예산안 제출·의결기한 (54조 1·2항)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상 예산안 국회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준예산 (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준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음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계속비·예비비 (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제도는 헌법에도 규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국가재정법에 규정.
국회의 예산 증액 제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세법정주의(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97·99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답 ④

30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①③ (○)

•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시행되나, 본예산의 항목·금액을 추가·수정하므로,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에 흡수되어 양자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된다.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에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내용도 포함된다.

④ (○)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편성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답 ②

31 다음 내용의 정부회계제도의 구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현금이 수납될 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될 때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① ㉠ 현금주의, ㉡ 단식부기
- ② ㉠ 발생주의, ㉡ 단식부기
- ③ ㉠ 현금주의, ㉡ 복식부기
- ④ ㉠ 발생주의, ㉡ 복식부기

해설

• 회계제도의 유형

인식 기준	현금주의	현금의 유입(수입)·유출(지출)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 현금 수취(수납)시 수입으로 인식, 현금 지불시 지출로 인식.
	발생주의	현금의 유입·유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실질적으로 수익이 획득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발생(자산의 변동·증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기장 방식	단식부기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만 수입과 지출로 파악하여 기록.
	복식부기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 거래의 이중성을 반영한 대차평균원리에 따른 오류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상 오류 방지.

답 ③

32 다음 내용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 공직자(배우자를 포함)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해도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제5조 2항 2호에서 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부정청탁 행위가 아님)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무와 위반시 처벌

공직자등 (배우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or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or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금지	위반시 과태료

㉣ (○)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내용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
	㉡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의 음식물, ㉡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10만원

※ ㉠+㉡ 또는 ㉢+㉣를 주는 경우 ⇨ 가액 합산 10만원 초과할 수 없으며, ㉠나 ㉡는 5만원 초과할 수 없음.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정해진 가액의 2배로 함.

㉤ (×) 특정인에게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답 ②

33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③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④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해설

- ① (×)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각 호 생략]

- ② (○) •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자 취업제한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구분	근거법률	대상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기간	철학적 기초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의무자(정무직, 4급 이상 등)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의무론 (부도덕한 동기 실현의 사전 제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①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퇴직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결과주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

- ③ (○)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로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④ (○)

		재산공개 의무자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추가)								

답 ①

34 다음 중 「국가재정법」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답 ①

35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용(移用)은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하고,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로, 매년 연부액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사용목적은 지정할 수 없다.
- ④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이월은 할 수 없다.

해설

④ (×) 명시이월비는 예산안 형식에 포함되며, 미리 전년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하며,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월된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로 한번 더 이월(재이월) 될 수 있다.

구 분	사전예측	예산형식에 포함	국회의 사전승인	재이월	사용 사례	공통점
명시이월	사전예측 가능	○	필요	가능(사고이월)	적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	×	불필요(사전의결원칙의 예외)	금지	많음	

•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답 ④

36 다음 중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성과주의예산은 1990년대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 ③ 미국 클린턴 정부의 1993년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PRA)은 결과 지향적 예산을 위한 입법으로 의회의 예산감시국(GAO)에서 추진하였다.
- ④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는 것으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다.

해설

- ①② (○) 1990년대 예산개혁은 예산집행의 자율성·융통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자율과 책임의 조화)으로 전개되어 투입·통제 중심이 아닌 산출(output)·결과(outcome) 중심의 예산운용방식을 강조. 결과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시민의 욕구나 관심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예산제도를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과 구별하여 신성과주의예산(New PBS) 또는 결과기준예산, 기업가적 예산이라 한다.
- ③ (○) 미국에서 1993년 도입한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는 결과 지향적 예산을 위한 입법으로서,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GPRA는 관리예산처(OMB)가 아닌 의회의 예산감시국(GAO)에서 추진한 법이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2002년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도입해 GPRA를 보완했다.
- ④ (×) 설문 내용은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내용이다.

답 ④

37 다음 중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은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2006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공무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이 구축되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정부의 재정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해설

- ③ (×)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답 ③

38 다음 중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는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조직 계층의 수가 증가한다.
- ② 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정보사회는 계급 욕구보다 고급욕구에 의한 동기 유발, 조직 내 개인 간 경쟁 가속화, 유연한 근무 문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 ④ 정보의 그레샴(Gresham) 법칙은 좋은 정보는 소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만 유통되는 현상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나타낸다.

해설

- ① (×) 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가 탈계층제화되므로 조직의 계층 수는 축소된다.
- ④ (○) 정보의 그레샴 법칙은 공유정보망 구축시 공적 정보시스템에는 사적 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정보가 축적되는 현상.

답 ①

39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심화되는 현대행정 국가에서는 외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②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Ombudsman) 성격을 가지고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설

④ (×)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국회의 권한(외부통제 수단-입법통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권한(내부통제 수단)

답 ④

40 다음 중 각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0년대 이후 OECD 선진국들은 주로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미국에서는 클린턴(Clinton) 행정부가 공무원 중심인 국정성과평가팀(NPR)을 구성하고 1993년 고객주의, 분권화, 성과주의, 감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혁신백서인 Gore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③ 영국에서는 품질의 표준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민헌장제도가 1996년 서비스 제일주의로 개편되었다.
- ④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로드맵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지방분권, 부총리제 폐지 등 조직구조 개편에 치중하였다.

해설

② (○)

고어(Gore) 보고서의 4대 개혁 원칙(NPR 1기 개혁)

- ① **번문목례 제거[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행정절차의 간소화](cutting red tape)** : 예산절차의 간소화, 인사정책의 분권화, 연방구매절차의 간소화와 조달청 권한의 부처위임, 감사관 기능의 재정립, 과잉규제의 탈피, 주정부·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부여.
- ② **고객우선주의(putting customers first)** : 기업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의사표현 및 선택기회 부여, 국민의 경쟁 촉진을 통한 정부독점의 포기, 시장경제원리 중시,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TQM 도입, 서비스기준(service standard, 영국의 시민헌장제도와 유사) 도입.
- ③ **결과 달성을 위한 권한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 의사결정권의 분화, 모든 연방공무원의 결과에 대한 책임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단 제공, 근무생활의 질 향상, 노사협조관계 확립, 리더십의 발휘.
- ④ **근본적인 감축[기본적 기능으로의 복귀](cutting back to basics)** : 불필요한 군살빼기, 세입 강화, 높은 생산성을 위한 투자확대,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재설계.

③ (○) 메이저(J. Major) 정부 : 1991년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 1991)

블레어(T. Blair) 정부 : 1998년 'Service First'로 확대

④ (×) 부총리제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부활

답 ④